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Incom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Issues and Counter Policies

朴 讚 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소득분배가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는 시장내의 소득분배 기능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때와 재분배의 미흡으로 평등성에 문제가 있을 때이다. 이러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의 경우는 시장정보 공유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평분배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와 소득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Gini계수로 어떤 소득을 토대로 계속되었는가에 따라 시장내에서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하여 재분배가 이루어진 이후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지 구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ini계수는 경상소득 또는 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으로 계속된 것이 대부분으로서 어떤 분배상태를 나타내는지 분명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Gini계수로 외국의 시장소득 Gini계수 또는 가처분소득 Gini계수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오류를 가져온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개선을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분배정책의 이해와 분배효과의 계측방법

1) 소득분배와 소득재분배

소득분배가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먼저 시장내의 소득분배 기능에 공정성 문제가 있을 때이다. 어떤 사회에서 근면하게 노력하여 정당한 대가로 소득을 받는 것보다 투기나 로비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소득을 얻는 행위가 보편적이라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이 사회에서 축적된 부와 가진 자에 대한 정당성이 성립하기 힘들며,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신뢰가 와해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에서 효율적 경제 운영은 어렵게 되는데,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은 근면하게 근로를 하기보다는 비정상적 방법을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내 소득분배기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처럼 시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분배를 1차 분배라고 하며, 다음에 나오는 2차 분배와 분명한 구분을 하여야 한다.

소득분배에서 문제가 되는 다른 상황은 재분배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이다. 시장에서 아무리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은 자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 또는 남보다 능력이 탁월한 자가 시장경쟁에서 앞설 것이다. 이처럼 시장경쟁에서 이긴 자들만 잘 살 수 있고 시장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미약하여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특히 풍요 속에 빈곤층이 늘어갈 때 사회적 문제는 대두된다. 이러한 경우 그 사회에서 부유한 계층의 부의 축적과정이 아무리 정당하였다 하더라도 계층간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 이때는 정부의 조세 및 사회보장장을 통한 재분배정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약화시켜야 하며 이를 2차 분배라고 한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장의 역사가 짧은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시장의 왜곡된 분배기능을 개선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각자 생산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생산의 성과물이 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즉, 시장 내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1차 분배정책은 공정성(fairness)을 기초로 시장정보 공유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평분배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소득분배를 통해 발생한 소득격차는 2차 분배 시 평등성(equality)을 기초로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축소의 달성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함이 바람직한 분배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와 재분배 정책이 각

각의 분명한 목표 없이 혼재된다면 소득분배정책은 실패하고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시장의 공정한 분배기능을 저해하는 정부개입이나 인위적 임금정책으로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하려 한다면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시장의 효율성 저하와 분배의 왜곡으로 이어져 1차 분배는 공정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2차 분배 시 평등성에 비중을 두지 않고 효율성에 맞춘다면 재분배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해당국가의 국민들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혐오감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평등성에 비중을 두는 것이 적절한데, 국민 개개인간 학력과 능력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소득불평등 혐오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동시에 근로의욕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국가이든 간에 상기한 두 가지 상황에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1차 분배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는 시장의 분배기능 공정성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 국민의 생산성(기술이나 능력 수준 등)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학력이나 기타 기술 등의 수준차이가 크게 나는 국가들의 1차소득 불평등도가 국민의 학력이나 기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고른 국가들의 1차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소득분배와 재분배 계측방법

소득분배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들의 사용도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과 직결된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Gini계수이다. 그런데 이 Gini계수가 어떤 소득을 토대로 계측되었는가에 따라 시장내에서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하여 재분배가 이루어진 이후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지 구별된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에서는 시장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시장소득이라 하며 이 소득에는 정부의 이전소득이나 조세납부로 인한 소득의 감소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장소득으로 Gini계수를 구한다면 그 결과는 1차 분배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시장소득에 정부의 이전소득을 포함시키고 동시에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납부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제한 소득이 가처분소득이 된다. 따라서 이 가처분소득으로 Gini계수를 구할 경우 그 결과는 2차 분배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이 된다. 이처럼 어떤 소득으로 Gini계수를 구하였는지를 잘 구별하여야 분배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ini계수는 경상소득 또는 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으로 계측된 것이 대부분이다. 통계청의 가계소비실태조사나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경상소득을 OECD 소득구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다. 즉,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이 포함되었으나 조세나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상소득 또는 소득으로 계측된 Gini계수는 우리나라의 어떤 분배상태를 나타내는지 분명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Gini계수로 외국의 시장소득 Gini계수 또는 가처분소득 Gini계수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오류를 가져온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도 계측시 시장에서 이루어진 소득분배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소득으로 소득불평등도를 계측하고 아울러 정부가 개입한 이후 소득분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으로 소득불평등도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 개선을 위한 걸림돌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즉, 2차 분배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개선을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즉, 소득재분배 관련 제도가 얼마만큼 재분배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측정을 매년 하기 어려운 현재 우리나라 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1) 소득통계의 문제

1997년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출을 늘려왔다. 그러나 실제로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소득통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이전소득과 직접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매년 파악이 안되고 있어, 관련정책이 매년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우선순위가 재 설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 평가도 통계에 기초하여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통계에 근거한 소득분배의 거시적 및 미시적 정책마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가구소득통계의 실태를 보면,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가구소득 및 지출 통계자료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도시가계조사에는 발표되지 않는 1인 가구, 비도시 지역 거주가구, 비근로자가구 등의 소득이 조사 발표되므로,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실상 가장 적합한 통계자료이다. 그러나 이 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므로 우리나라 경제가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1997년 말을 기점으로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빈곤상황이나 소득불평

등도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한편,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는 매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1인가구, 비근로자가구, 그리고 비도시지역 거주가구의 소득이 제외되고 있어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불평등도를 계측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처럼 관련통계의 미흡으로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의 도시에서 거주하는 2인 이상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소득으로 Gini계수를 계측하여 이를 외국의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Gini계수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를 좀더 상세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외국처럼 전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면 우리나라의 Gini계수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표를 보면 OECD 소득분류에 따라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Gini계수가 나타나 있는데 근로자가구의 Gini계수가 1996년에는 0.286 그리고 2000년에는 0.307로 전가구의 Gini계수인 0.335(1996년)와 0.386(2000년)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1996년과 2000년의 가처분소득¹⁾ Gini계수

	1996	2000
전가구	0.335	0.386
근로자가구	0.286	0.307
비근로자가구	0.406	0.473

주: 1) 여기서 이용한 가처분 소득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토지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 직접세를 이용하여 계산한 Gini계수임.
자료: 박찬용 외,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즉,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조사의 2인 이상 도시거주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소득으로 계측한 Gini계수를 외국의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Gini계수와 비교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만일 국제비교를 하려고 한다면, 5년마다 조사되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서 전가구 소득을 이용한 소득불평등도를 도출하여 외국의 전가구 소득불평등도와 비교해야 한다. 그 이유는 OECD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전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계측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OECD 주요국의 소득통계 조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 OECD 국가들의 경우 소득조사가 도시와 군부 구분 없이 전국단위로 1인가구 및 2인 이상 가구 그리고 비근로자가구를 포함하여 전가구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 일본,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그렇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소득조사에는 사회보장 수혜 부분이 상세하여 현재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수준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각 프로그램의 수혜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킨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통해 소득분배 및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과 같은 조사자료가 5년마다 조사발표되고 있어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온 사회복지의 재분배 효과 분석이

매년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현재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매년 조사하거나, 또는 현재 2인 이상 도시거주 근로자가구만의 소득을 발표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의 범위를 전가구로 확대하여 조사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적 이전소득과 직접세의 문제

우리나라의 공적 이전소득은 사적 이전소득에 비해 그 규모가 상당히 작아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대단히 미흡하다. 소득 십분위(Deciles)에서 각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받은 평균 사적 이전소득과 평균 공적 이전소득의 액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액이 공적 이전소득액보다 약 5배까지 큰 분위가 있으며, 그 차이가 가장 적은 분위의 경우도 사적 이전소득이 공적 이전소득보다 약 2.5배가 큰 것으로 최근 연구¹⁾에서 나타났다. 또한 직접세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같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

다음 표를 보면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 소득세 각각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가 나타나 있다.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만으로 구성된 1차소득 Gini계수가 2000년에 0.445로 계측되었고, 가처분소득(조사)의 Gini계수는 0.385로

1) 박찬용·강석훈·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계측되었다. 즉, 1차소득과 가처분소득의 Gini계수 차이는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과 소득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1차소득의 소득불평등이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처분소득(조사)은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소득세액을 이

용한 결과이고, 가처분소득(추정)은 가계소비실태조사 대상가구의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소득세율을 이용하여 각 가구별 소득세액을 추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한 Gini계수이다.²⁾ 위와 같이 1차소득의 소득불평등도를 축소하

표 2. 1차소득¹⁾과 가처분소득²⁾ Gini계수 비교(2000년)

소득분류	Gini 계수
1차소득	0.445
가처분소득(조사)	0.385
가처분소득(추정)	0.365

주: 1) 1차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산소득

2)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사회보장 부담금 - 소득세(또는 직접세)

시장소득 = 1차소득 + 사적 이전소득

자료: 박찬용 외,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의 표를 재구성

는데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그리고 소득세가 기여한 Gini계수 감소분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에서 2000년의 사적 이전소득이 1차소

득 Gini계수를 0.042 포인트 만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즉, 사적 이전소득으로 Gini계수가 0.403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이전소득과 소득세에 따른 전가구 Gini계수 감소분(2000년)

	Gini 계수 축소치
사적 이전소득	0.042
소득세(추정)	0.025
공적 이전소득	0.014
소득세(조사)	0.005

자료: 박찬용 외,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의 표를 재구성

2) 여기서 소득세 추정은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모든 가구의 소득에 우리나라 현행 누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동시에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된 것임.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액을 이용하여 가처분소득 계산에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음.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0.014 포인트로 사적 이전소득의 그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의 축소효과를 측정한 결과 0.005 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의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보다 작은 것이다.

그런데 자영자가구의 경우 얼마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를 조사시점에 정확히 알기 어렵고, 또한 정확한 납부액을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가구의 소득세액을 소득세율에 따라 추정한 후 이를 적용하여 소득불평등도의 축소효과를 살펴보았다. 즉, 가구소비실태조사 대상가구의 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소득세는 1차소득의 Gini계수를 0.025 포인트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득세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가 상당히 커져,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축소효과보다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세의 누진율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징수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과 비교해 보자. <표 4>에서는 OECD국가들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Gini계수가 나타나 있다. 시장소득이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소

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과 함께 사적 이전소득이 포함된 소득이나 공적 이전소득과 조세지출 및 사회보장 부담금 지출은 고려되지 않은 소득이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은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제한 소득이다. 따라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각각의 소득으로 Gini계수를 구한 다음 그 차이를 살펴보면 각국의 재분배 정책 효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Gini계수는 OECD국가들 중에서 중간수준으로 나타나 공적 이전소득 및 직접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을 포함한 가처분소득의 Gini계수는 2000년의 경우 0.386, 그리고 직접세 대신 소득세를 적용한 가처분 소득의 Gini계수는 0.365³⁾로 약간 낮아졌으나, 비교된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가 되고 있다. 또한 소득세율을 적용한 추정된 소득세를 이용한다면 하더라도 그 Gini계수가 0.365로 역시 대상국가들 중에서 가장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시장소득의 Gini계수가 0.439였으나 가처분소득의 Gini계수를 보면 0.230으로 0.209 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공적 이전소득, 직접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유럽보다 덜 발전되어 있다는 미국의 경우도 시장소득 Gini계수의 경우 0.411에서 가처분소득 Gini계수의 경우 0.344로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고 있

3) 여기서 직접세 대신에 소득세를 적용한 이유는 OECD에서는 가처분소득 계측시 직접세를 사용하지 않고 소득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표 4. 전가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Gini계수 OECD 국가와 비교

OECD 회원국가 ¹⁾	시장소득 Gini계수(A)	가처분소득 Gini계수(B)	A - B
스웨덴(1994)	0.439	0.230	0.209
핀란드(1995)	0.379	0.228	0.151
프랑스(1994)	0.417	0.278	0.139
아일랜드(1994)	0.461	0.324	0.137
영국(1995)	0.428	0.312	0.116
독일(1994)	0.395	0.282	0.113
네덜란드(1995)	0.348	0.255	0.093
캐나다(1995)	0.374	0.285	0.089
호주(1994)	0.391	0.305	0.086
노르웨이(1995)	0.335	0.256	0.079
미국(1995)	0.411	0.344	0.067
한국(2000) ²⁾	0.403	0.386 (직접세)	0.017
		0.385 (조사된 소득세)	0.018
		0.365 (추정된 소득세)	0.038

주: 1) 괄호안 수치는 조사 연도를 의미함.

2) 한국의 가처분소득 Gini계수는 직접세와 조사된 소득세 및 추정된 소득세 각각을 이용하여 도출된 가처분 소득을 이용하여 계산된 것임.

자료: 박찬용 외,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자료를 재구성

OECD,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Social Policy Studies No.18*, OECD Paris, 1995;

Foster, Michael,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42*, DEELSA/ELSA/WD (2000)3, OECD, Paris 2000.

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된 소득세나 추정된 소득세 어느 쪽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공적 이전소득과 소득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는 위에서 비교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적 이전소득의 규모 자체가 적어서, OECD 선진국가들과 같이 공적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도를 대폭 축소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도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 수준이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소득격차는 시장내 분배기능이 아무리 공정성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다시 축소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분배정책을 통해 축소하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적 이전소득의 규모가 너무 적고 또한 상위소득계층의 소득이 2000년에 급격

히 상승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OECD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Gini계수는 OECD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낮은 그룹에 속하나 공적 이전소득과 직접세 그리고 사회보장부담금을 고려한 가처분소득 Gini계수로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 이유는 공적 이전소득과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가 OECD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적 이전소득의 절대액수 수준을 공적 이전소득 절대액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분위별로 상이하나 약 2배에서 5배 이상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사적 이전소득은 수혜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여자에 의해 그 액수와 지급시기가 결정되며, 더욱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적 이전소득을 지급하던 친인척의 생활도 어려워 사적 이전소득의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상당히 불안정한 이전소득이다.

2000년에 들어와 공적 이전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단, OECD 선진국들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적 이전소득을 확대할 경우 오는 2008년 이후 본격화되는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소득불평등 축소효과를 고려하여 그 추진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00년에 들어와 소득세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도 커졌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많이 미흡하다. 이는 경제위기를 통해 상당한 소득증가를 경험한 고소득계층에 대한 누진적 과세뿐만 아니라 징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그 이유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조사자료가 5년마다 조사 발표되고 있어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온 사회보장의 효과성 분석이 매년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수준의 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매년 조사하는 방안, 또는 현재 2인 이상 도시거주 근로자가구만의 소득을 발표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의 범위를 전가구로 확대하여 조사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